

# 「서울시50플러스재단 회계 업무처리 지침」 발췌

## 강사비 지급기준

### 2 강사비

#### 1. 일반교육 강사

등급	대상(전.현직)		지급액(원)	
	공공분야	민간분야	기본 (1시간)	초과 (매시간)
특별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교 총장(급)</li> <li>장관(급),</li> <li>광역지방자치단체장</li> <li>대사</li> <li>국회의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간문화재(무형문화재보유자)</li> <li>대기업 총수 (상시 근로자수 1,000명 이상)</li> <li>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</li> </ul>	400,000	200,000
특별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언론사 대표</li> <li>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장</li> <li>단과대학장(급) 교수이상</li> <li>차관(급)</li> <li>광역지방의회의원, 기초자치단체장</li> <li>정부투자기관, 특별행정기관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(급)</li> <li>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</li> </ul>	320,000	160,000
일반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(교) 교수</li> <li>판.검사</li> <li>기초지방의회의원</li> <li>언론사 임직원</li> <li>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임원</li> <li>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</li> <li>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연구 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</li> <li>4급이상 공무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립 10년 이상의 기업, 기관, 단체의 임원 이상</li> <li>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등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</li> <li>변호사, 전문의, 변리사, 기술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경영지도사, 법무사</li> <li>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</li> <li>컨설턴트 (대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)</li> </ul>	240,000	120,000
일반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(교) 전임강사</li> <li>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직원</li> <li>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</li> <li>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</li> <li>5급이하 공무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, 기관, 단체의 부장급 이상</li> <li>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등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</li> <li>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</li> <li>연구기관의 연구원</li> <li>일반 컨설턴트</li> </ul>	150,000	75,000

등급	대상(전·현직)		지급액(원)	
	공공분야	민간분야	기본 (1시간)	초과 (매시간)
일반3급	-	•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	80,000	50,000
보조강사	•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	40,000	40,000
원어강의	•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% 지급		-	-
별도기준	•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		시간당 1,000,000 이내	

- 민간분야 종사자 초과 매시간 지급

## 2. 정보통신교육 강사

등급	대상(전·현직 포함)	지급액(원)	
		기본 (1시간)	초과 (매시간)
정보화 1급	• 전·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• 대학교수, 박사·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	150,000	100,000
정보화 2급	• 전·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• 박사학위, 기술사소지자,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	100,000	80,000
정보화 3급	• 전·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• 정보화강사1,2 이 외의 강사	80,000	70,000
보조강사	•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40,000	40,000
이러닝	•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, 질의응답,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	20,000 (1일)	-

- 정보화 교육과정(첨단기술) 강사: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 가능

-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: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 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

## 3. 다수인 출강 강사 \*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

강의시간	강사인원	지급액(원)
2시간 미만	5인 이하	500,000
	6인 이상 ~ 10인 이하	700,000
	11인 이상	900,000

2시간 이상	5인 이하	700,000
	6인 이상 ~ 10인 이하	900,000
	11인 이상	1,100,000

- 교육운영 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% 범위 내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
-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시중가를 적용

#### 4. 퍼실리테이터(FT)

등급	대상	지급액(원)	
		기본(1시간)	초과(매시간)
FT 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</li> <li>• 기업 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</li> <li>• 전·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230,000	150,000
FT 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</li> <li>• 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li>• 전·현직 차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200,000	130,000
FT 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</li> <li>• 대학교수 이상</li> <li>• 전·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150,000	100,000
FT 4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</li> <li>• 대학 전임강사(급) 이상</li> <li>• 전·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120,000	80,000

- 퍼실리테이터 요건(역할):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
-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 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

#### 5. 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

##### 1) 강의시간 산출

- 가.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, 초과는 3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산출 (30분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
- 나.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
  - 원칙: 강의일자별 산정이 원칙
  -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
  -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,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

내용(주제)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

2) 여비 산정 기준

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「공무원  
여비규정 별표1 제2호」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

3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

-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 
시행령」〔별표2〕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
-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을  
감안 「청탁금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 
대표이사 방침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